

##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김 국 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들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급진전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제5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에 위한 초기조치'에 관한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그 후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동결자금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자, 북한은 7월 14일 5MW 원자로 등 영변 5개 핵시설에 대한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들은 이에 대한 봉인조치를 취하였다. 2·13 합의에 따라 초기단계 조치들이 이행되자 남북정상회담도 추진력을 받게 되었다.

남북한은 8월 8일 동시에, 8월 28~30일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미국 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고, 동 회담이 6자회담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북한이 수해로 인해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10월 초로 연기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남북한은 다시 10월 2~4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한과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작년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전쟁의 종료를 선언하고 북미간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최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진전되어가자 부시 대통령은 8월 31일 아태지역 언론인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통령직 임기 내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김정일 위원장도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9월 1~2일 제네바에서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가진 직후 "북한이 2007년 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고, 핵시설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도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현안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많은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월 3일 북미 제네바회담에서 '연내 핵시설 불능화'에 합의하였다고 밝히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법에 따른 제재를 해제하는 등 정치·경제적 보상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호주 시드니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9월 7일 부시 대통령과 8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지난 수개월간 6자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2·13 합의가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이 6자회담 진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을 폐기한다면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런 메시지를 10월 2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수립을 목표로 가까운 장래에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를 출범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한미 정상간의 일치된 입장은 이달 중순 개최가 유력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등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연말까지 완료하기 위한 방안과 이에 상응하는 정치·경제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북한 핵폐기 문제가 6자회담을 통하여 순조롭게 진척됨에 따라 10월 2~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정상이 경제공동체 형성과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게 되면 이는 다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향한 6자회담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미관계도 급진전하여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다.